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2, 3면

윤석열 정부의
위기
4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5면

알렉스 칼리니코프 논평
서방 진영에 균열을
내고 있는 중국
7면

배달의민족
라이더·사무직
파업 예고
14면

윤석열의
마약과의
전쟁
1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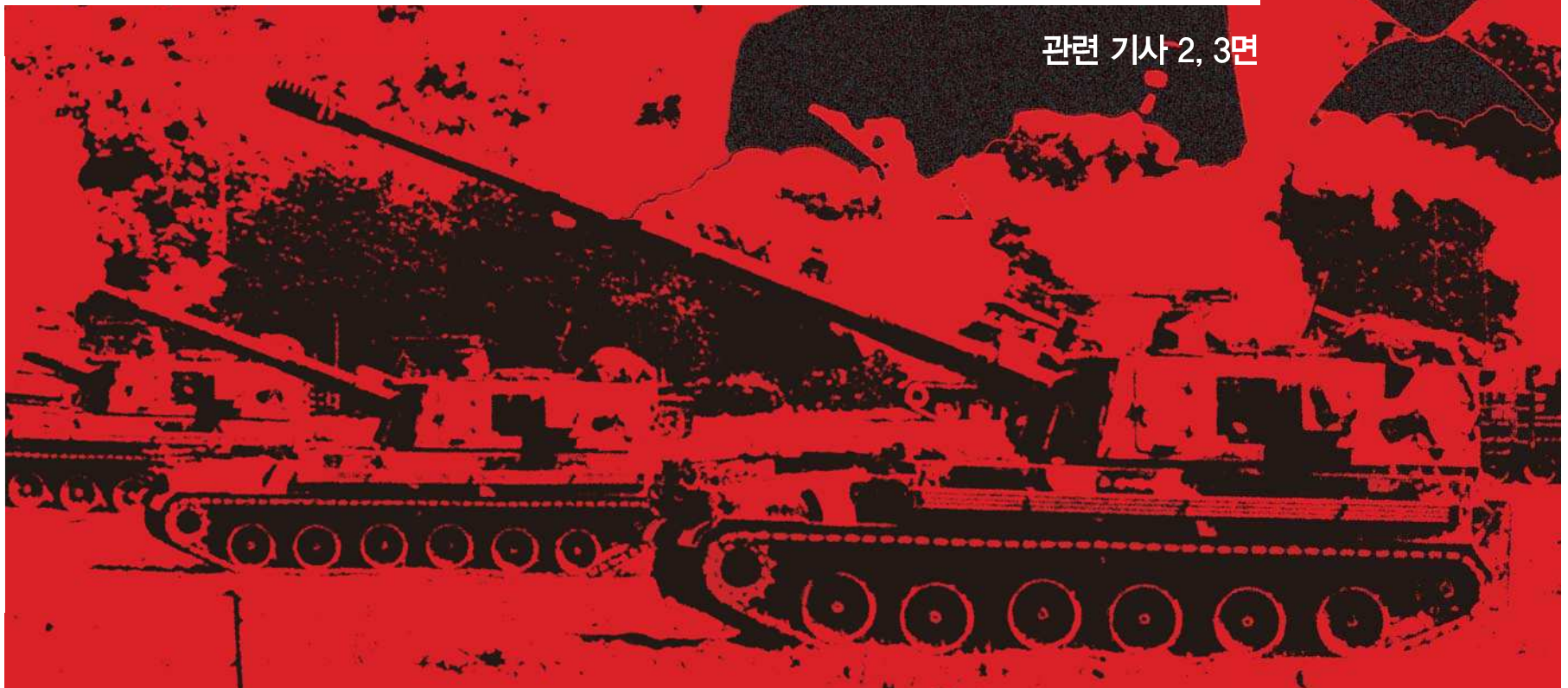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장차

한국군 파병도

포함될 것인가

관련 기사 2, 3면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은 CIA 도청 내용을 자인한 셈이다

김영익

4월 19일 대통령 윤석열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군사 지원 결정을 위한 명분을 쌓기 시작한 듯하다.

얼마 전에 폭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청 내용을 보면, 3월 1일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과 외교비서관 이문희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바이든이 윤석열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었다.

이문희는 살상 무기 지원 금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미국 측에 적극적 지원 약속을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게다가 그는 국방비서관 임기훈이 3월 2일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미국에 이미 알렸다고, 임기훈의 생각을 들어 보라고 김성한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김성한은 이문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폭로된 CIA 문서를 보면, “그는 이 문제가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우려했다.” 그래서 김성한은 폴란드를 통한 포탄 우회 지원 방식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후에 드러난 정황들은 위의 내용(과 문건에 실린 다른 정보들)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미국의 다른 문건을 보면, 포탄이 경남 진해항에서 독일로 이송되는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4월 17일 MBC는 그 문건대로 한국에서 독일 노르텐함항으로 군수 물자가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국내 포탄 제조업체가 앞으로 155밀리미터 포탄 40만 발 이상은 물론, 기관총탄 430만 발과 전차포탄 5만여 발을 폴란드에 수출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SBS는 이 무기들이 폴란드에서 모두 쓰이는 게 아닐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성한의 의견대로 우회

지원이 이뤄져 온 정황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자신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앞서 문서에서 확인했듯이, 이문희와 임기훈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에 부합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무기 우회 지원은 미국의 요구를 우선한 결정이고, 그로 인해 ‘국익’이 훼손됐다고 비판한다.

분명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놓고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은 그 압박을 단지 일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한국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윤석열이 말하는 ‘국익’에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은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기껏해야 극도로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윤석열의 국내 정책이 그렇듯이 말이다.

〈조선일보〉는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



의 말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성의를 보인 것이고, 추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나 방산 수출 같은 실익도 고려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간접적인 무기 수출에 나서 온 것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이런 행보는 한국을 제국주의간 충돌에 더 깊이 연루시키며 큰 위험을 키우고 있다.

분열돼 가는 세계, 제국주의적 영향력 유지에 필사적인 미국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내용에는 중국의 고고도 스파이 드론 개발, 러시아의 미국 스타링크 위성 차단 시도 등 경쟁자들에 대한 첩보도 포함되어 있다. 점증하는 국가간 갈등 속에 미국 정부가 경쟁자들의 능력을 파악하려고 애썼음을 보여 준다.

미국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를 지속적으로 도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유출된 여러 문서들에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유엔 고위 관리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10년 전,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유엔 본부를 상대로 전자 감시를 하고 있지 않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유출된 문서를 보면, 역시나 거짓말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흑해 곡물 협상 등에서 러시아에 너무 유화적으로 처신했다고 본 듯하다. 한 문서에는 “[구테흐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광범한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쓰여 있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독일 총리 메르켈 등 주요국 정상들의 통화까지 도청했음이 폭로된 적이 있다. 그러자 미국은 한동안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독일은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독일 지부장을 추방했다.

이번에도 한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영국, 이집트, 이스라엘, 일본 등 동맹국을 상대로 도청 등 첩보 활동을 벌인 게 분명한 정황들이 폭로됐다. 바이든 정부는 문서 유출의 의미를 축소하며, 이번 사태가 크게 번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 비용

이를 지원하고자 〈워싱턴 포스트〉는 동맹국들의 반응이 10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고 보도했다. 대체로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처럼).

한 유럽 국가의 관리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의 정보 협력은 매우 중요해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같은 정보 유출은 그에게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치르는 “비용”이다.

다른 관리도 “미국은 우리의 안보에

중요한 주요 정보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경제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동맹국 도청 같은 일도 벌어진다.

그렇지만 많은 동맹국들이 안보 현안에서 여전히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그런 협력의 필요성은 더 커졌을 것이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나날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도 미국 뒤에 서서 후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도청 문제로 미국을 대놓고 비난하지 않는 듯한 것은 이런 배경 속에서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이는 합의를 하려고 한다.

윤석열과 그의 대통령실 참모들도 도청 보도에 잠시 모멸감을 삼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아닌 한국 지배계급의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위해 그런 모멸감쯤은 대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속한 계급 이익에만 충실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정보감시법

도청 행위가 폭로됐지만, 바이든 정부는 정보기관들의 활동을 제약할 생각이 물론 없다.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의회가 연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FISA 702조는 미국 정부가 영토 밖에서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다. 연말까지 미국 의회가 재승인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시효 만료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 법이 “국가 안보의 주춧돌”이라며 의회에 재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번 문서 유출이 역설적으로 FISA 702조의 필요성을 확인해 준다고 주장한다. FISA 702조에 근거한 감시 활동으로 얻은 정보들이 얼마나 광범하고 미국에 유용한지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분열돼 가는 세계 속에서 미국 국가는 제국주의적 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국 도청 같은 오만한 행동을 계속 벌일 것이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확전에 일조하는 범죄 행위다

박이랑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서방 대 러시아, 제국주의간 전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발 담그려 한다.

윤석열은 4월 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였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은 비록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 전제 조건들을 언급했지만,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이 시사한 군사 지원은 당분간 무기 제공으로 진행될 테지만, 이는 단지 물건만 가는 게 아닐 것이다. 지금 나토군이 하는 것처럼, 한국이 무기 사용을 위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는 일도 하게 될 테니 말이다. 향후 전황 등에 따라서는 윤석열의 군사 지원은 파병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그동안에도 한국 정부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미국 지배자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라 왔다. 이런 압박은 얼마 전 폭로된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들의 대화 도청 내용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자신이 미국 대중국·러시아 간 힘겨루기 싸움에서 미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언급도 그 일환이다.

윤석열과 한국 대기업 등 지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지속되면서 계속되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희생은 안중에 없다. 한일 군사 협력 복원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을 내친 것처럼 말이다.

윤석열의 선택은 곧장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분쟁에 확실하게 개입"하는 것이며 이를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인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며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같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다만 문제를 언급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까지 거론되는 첨예한 미·중 갈등 국면을 고려한다면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킨다.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뿐 아니라, 턱없는 복지 예산을 갉아먹으며 계속해서 늘어가는 국방비만 봐도 그렇다.

제국주의 경쟁과 전쟁은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 재앙일 뿐이다.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등지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대리전을 통해 개입해, 끔찍한 파괴와 학살, 난민 위기 등을 초래한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반대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러시아에서든, 서방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디에서나 자국 정부의 전쟁 지원이나 참여에 반대하는 대중적 반전 운동을 통해 찾아올 것이다.



군사 지원은 단순한 무기 제공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세일즈맨’

최근 폭로된 미국 기밀문서에는 한국이 155밀리미터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우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있었다. 4월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 진해항에서 독일 노르텐함항으로 군수 물자 이동이 있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155밀리미터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제공했다.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탄약을 제공하는 미국이 자국의 재고를 한국산 포탄으로 채운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이후 무기 수출로 전쟁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를 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74퍼센트나 증가했다.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세계 9위에 달한다.

한국 무기 수출 규모를 끌어올린 최대 주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발 담그고 있는 폴란드

다.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규모에서 미국,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폴란드는 지난해에만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50대 등 총 20조 원 규모의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사들였다.

지난달 <로이터>는 한국의 K9 자주포 부품이 쓰인 폴란드의 크라프 자주포가 한국 정부의 승인 아래 우크라이나에 제공됐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한국은 폴란드에 기관총탄, 전차탄 등 탄약류 430만 발 이상을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폴란드뿐 아니라, 러시아에 인접한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여러 나토 회원국들도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미 한국산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청년 사병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윤석열은 심지어 군수 산업을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평범한 노동자·서민에게 제국주의 전쟁은 재앙일 뿐이다

윤석열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최근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한국갤럽 4월 2주 차). 한 달 전에 견줘 긍정평가는 더 줄고(27퍼센트), 부정평가는 더 늘었다(65퍼센트).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불만이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의 오만한 도청 행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회피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관련 기사: 2면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발언은 CIA 도청 내용을 자인한 셈이다’)

노동시간 연장 시도, 가스요금 인상 등 노동자 등 서민들의 조건을 공격한 데 이어,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무대책도 커다란 불만을 사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30퍼센트 이하 지지율을 보인 때는 박근혜 집권 말기에 정권 퇴진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10월 말과, 역시 레임덕에 시달리던 문재인 집권 후반기였다.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정부의 지지율이 30퍼센트 아래를 밀도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윤석열은 강제동원 ‘해법’부터 주 69시간제 추진, 건축 재정 등 온갖 개악을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정작 청년층의 다수는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다. 20·30대의 지지율은 13~14퍼센트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인기 없어도 하겠다”던 노동·연금 개악 추진은 답보 상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 여권의 ‘집토끼’들(특히 기업주들)에게도 불만을 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최대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53퍼센트)가 긍정평가(44퍼센트)를 앞섰다. 윤석열의 4월 2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도 별 효과가 없었다.

4월 5일 치러진 울산 남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했다. 울산 남구는 현 국민의힘 당 대표인 김기현이 도합 4선을 지내 국민의힘의 ‘아성’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이는 윤석열의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한 동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월을 지나며 역전됐다.



집권 1년도 안 된 정부의 지지율이 30퍼센트 아래인 것은 드문 일이다. 4월 15일 윤석열 퇴진 집회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돈 봉투 의혹은 기성 정당의 새삼스럽지 않은 부패를 보여 주지만, 검찰이 지금 시점에서 이 의혹을 꺼내 든 것은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흐름을 끊으려는 시도일 것이다.(관련 기사: 5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똥 묻은 개 국힘이 겨 묻은 개 민주당을 나무란다)

여권 내에서도 내년 총선 전망이 어둡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도 여소야대 국회인데 내년 총선에서도 의석을 역전시키지 못하면 집권 내내 여권이 의회 소수파 신세가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개악 추진 시 감수해야 할 위험이 더 커진다.

‘전광훈 소동’도 여권의 위기와 불투명한 총선 전망과 관련 있다.

김기현은 극우 목사 정치인 전광훈과 ‘손절’하라는 홍준표를 상임고문에서 해촉하더니 갑자기 전광훈 추천 당원 981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광훈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벌여 총선 공천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였다.

전광훈은 윤석열더러 좌고우면하지 말고 확실히 우파 노선을 추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우파 지지층을 결집시키키는 것이 낫다는, 전광훈 나름의 위기 극복 ‘해법’인 것이다.

최근 윤석열 위기의 특징은 그것이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들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 모두 우파 정부인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의 성격을 규정한다.

구조적 위기

특히, 미·중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고 여기서 어느 한편을 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서 윤석열은 군사적·지정학적으로 서방(특히 미국과 일본)을 지지·지원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에 이득이라고 보고 나름의 선택을 했는데, 이런 방향이 만만치 않은 모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454호 ‘공급망 재편 비용 전가하는 미국 지배자들, 난처해진 한국 지배자들’, [노동자연대TV 동영상] 시사/이슈 토크: 미 반도체법과 뒤통수 맞은 한국)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거나 방향을 전환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대외 요인들이라서 주 69시간제 추진을 잠시 멈춘 것 같은 대응도 하기 어렵다.

윤석열은 한미(일) 안보 동맹 강화 방향을 확실히 하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의사도 내비쳤다.(관련 기사: 3면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확전에 일조하는 범죄 행위’)

미국과 나토가 필요로 할 때 확실히

지원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등 경제 문제에서 미국에게 얻어 낼 것은 얻어 내자는 계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주들의 지지를 확실히 챙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보면, 사태가 윤석열의 바람대로 흘러가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동맹국에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폭넓게 허용하던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관련 기사: 본지 455호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어오는 게 별로 없으면, 노동·연금 등 개악 추진을 잠정 보류한 것도 인내하며 기다린 기업주들에게도 크게 실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 방침과 관련해서는, 미국·나토와 러시아라는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 힘겨루기에 끼어들었다가 한반도가 격랑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대중의 불안감이 적지 않다.

윤석열의 인터뷰가 실린 <로이터> 통신 보도 직후, 러시아 정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전쟁 개입”이라며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발언에는 중국 정부가 분노했다.

외교 문제에서 일단 ‘고’ 하는 수밖에 없는 윤석열은 국내에서는 국가보안법 탄압 등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더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 수사로 대중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계속될 것이다.(관련 기사: 15면 윤석열은 경찰력 정당화 위해 ‘마약과의 전쟁’ 벌인다) 위기가 있다 해도 윤석열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게 결코 아니다. 윤석열도 사태를 반전시키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말고 지금 정부 반대 투쟁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분열 책동에도 맞서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층의 대응 태세는 아쉽다. 민주노총은 매년 여는 메이데이 집회를 제외하고는, 멀찌감치 7월에 쟁의 시기를 집중시키겠다는 계획만 내놨다.

더구나 안타깝게도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보다는 내년 총선 대응에 주된 관심이 가 있는 듯하다.

이현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똥 묻은 개 국힘이 겨 묻은 개 민주당을 나무란다

임준형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영길 당시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 시키려고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불법 자금 9400만 원을 확보해 민주당 의원 10~20명에게 건넸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돈 봉투 전달에 송영길의 당시 보좌관 박모 씨,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관여했다고 한다.

이번 의혹은 검찰이 이정근의 다른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정근의 휴대전화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녹취록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듯한 실무자들 간의 대화가 공개됐다. 지금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귀국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을 비난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과 전광훈 소동 등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에서 관심을 돌려놓을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부패로 말하면, 국민의힘은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원조’ 정당이다.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옛 이름) 2008년 전당대회에서 이번과 똑같은 돈 봉투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주류였던 친이명박계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당대표로 미는 과정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었다. 역시나 셀프 폭로한 당협위원장인 고승



돈 봉투 살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

덕 하나만 적발되고 마무리됐다. 박희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연루 의혹은 당시 온갖 비리 의혹으로 얼룩졌던 이명박과 정부·여당에게 타격이 됐다. 이명박의 부패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당권을 쥔 박근혜는 15년간 사용하던 한나라당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그러나 박근혜 본인도 부패로 탄핵됐고, 덕분에 당명이 다시 바뀌었다. 박근혜는 삼성 이재용이 298억 원을 미

르·K재단과 정유라 등에 지원한 대가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박근혜의 지시로 박근혜의 장관 출신 문형표가 나서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이다.

환멸

이후에도 더 당명을 바꿔 가며 지금의 국민의힘에 이르렀지만 부패는 현재진행형이다. 광상도의 “50억 원 클럽”이 드러난 게 불과 얼마 전 일이다. (지난 2월 광상도는 1심에서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영터러 수사와 판

결이 오히려 비난을 받았고 야당은 특검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떨어진 것에 대응하려고 이번 사건을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위기에서 민주당이 반사이익 얻는 것을 막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또는 무당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반감 때문에 민주당에게 표를 던지려던 사람들에게 환멸을 주려는 것이다.

국민의힘 등이 아무 근거도 없이 최대 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살포와 연관돼 있는 것처럼 모략모략 연기를 피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것으로 이재명까지 엮는 것은 억지다.

국민의힘이 내미는 근거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송영길을 적극 밀었다는 “소문”과, 송영길이 당대표 당선 후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다는 당시 경선 경쟁자 이낙연 측의 불만 등 불확실한 정황 뿐이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 추락은 한일 강제동원 합의,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 언급 등 주로 무리한 서방(미·일) 제국주의 지원 방침 때문이다.

윤석열은 제국주의 갈등이 심화하는 속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서방편을 들기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등 자국의 노동자·서민을 내쳤고, 이로 인해 큰 반발을 샀다.

또한 친미 외교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 등 또다른 위기 요인을 낳고 있다.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은 민주당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비난은 역겹지만, 이번 의혹은 민주당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새삼 보여 준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정근의 다른 비리 사건 판결문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 이정근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받고 기업주의 청탁을 들어 줬다. 스스로를 “로비스트”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2016년부터 3만 건에 이른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의혹이 터져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1997년 이후 세 차례나 집권하며 15년간 국가 권력을 잡았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배계급의 선호도에는 못 미쳐도 집권을 통해 지배계급 내에 자리 잡고 그들 나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국가 관료와

유력 정치인, 자본가들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대가를 주고 받으며 서로 뒷배를 봐주는 일이 벌어진다.

국가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경쟁적으로 로비를 한다. 자본주의 국가도 기업주들의 선호와 시장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본이 활발히 이윤을 축적하고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과 군사력에 이

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패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박이장파도 같다.

국민의힘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주당도 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계급 특권을 누린 사례도 적잖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대중의 시선을 자신들의 훨씬 더 큰 허물로부터 돌리려 한다.



한국 지배자들은 미국이 소련을 대적하려고 처음 만든 '파이브 아이즈'의 한미일 버전을 기대한다

한미일 정보 동맹 — 중국 감시 '쓰리 아이즈'

4월 26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실 도청 문제를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고, 오히려 정상회담을 한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에 일본도 참여시켜 3국 정보 동맹으로 나아가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도청까지 해 가며 한국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 자국 패권 전략

에 끌어들이려 해 공분이 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군사 정보를 더 많이 주고받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또한 이로써 윤석열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공식 정상화한 것에서 나아가, 미국 주도의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려 한다.

'파이브 아이즈'급

현재 한미 간 군사 정보 협력 수준은 상당하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과는

한국군 통신감청부대나 주한미군 핵심 정보부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한다.

한국은 일본과도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2016년 한일 지소미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TISA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매개로 해서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지소미아는 실시간이 아니라 사후 요청이 있을 때, 2급 이하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논의될 한미일 정보동맹이 기존 수준을 뛰어넘어 '파이브 아이즈'급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이 냉전 시절 소련 등 동구권을 감시하려고 만든 정보 동맹체로, 오늘날에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최우선 영어권 동맹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다.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각종 방식으로 획득한 기밀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번에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 또한 '파이브 아이즈'는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MD로 더욱 편입

한미일 3국의 정보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문제와 연관이 깊다.

MD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핵심으로 상대방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무력화시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기 체계다. 미국은 MD를 고리로 일본, 한국 같은 중국과 인접한 동맹국

들에 군사 기지를 세우고 자국 전략에 편입시켜 왔다.

그러나 한국의 미 MD 참여는 한반도를 위험천만한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가는 일이다.

한국의 미 MD 편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지만 한국 정부는 독자적 MD(KAMD)라고 변명하며 편입을 부정해 왔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미 간 MD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돼 있으며, 개념 수준에서는 제주, 평택의 한국 군사 기지들이 일본 오키나와나 미국 괌 까지도 방어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반발해, 중국은 MD 편입을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며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한국의 경북 성주 사드 배치에 보복 대응을 했던 것 또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가 미국 MD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금 끔찍한 야만을 드러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에도 미국의 MD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이 폴란드, 루마니아 등 러시아 인접국들에 MD 배치를 추진해 러시아가 미국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가자, 2016년 러시아가 이에 맞서 핵무기 탑재 가능한 미사일을 폴란드 접경지에 배치하며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됐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정보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미중 갈등으로 인한 군사적 불안정 확대에 일조하는 일이다. 대중적인 반대 운동을 건설해 그 위험한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김승주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wspaper.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 진영에 균열을 내고 있는 중국

브라질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자당(PT)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가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가 극우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간발의 차이로 이겼을 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축하해 줬다. 하지만 최근 룰라가 중국을 방문해서 한 말은 바이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상하이에서 룰라는 달러가 세계의 지배적 화폐로 자리 잡은 것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밤 저는 왜 모든 나라들이 달러로 무역을 해야 할까 자문합니다.”

베이징에서 룰라는 발언 수위를 더 높였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그저 상업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정치적 관심사도 있는데, 세계 거버넌스를 바꿀 새로운 지정학을 수립하는 것, 이를 위해 유엔이 더 많은 대표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룰라는 또한 중국을 비롯한 일련의 국가들을 모아 중재 그룹을 구성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전쟁을 장려하기를 멈추고 평화에 대해 말하라” 했다.

룰라 자신은 부인하지만 그의 이런 태도는 많은 부분 경제 때문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지난 10년간 중국과 브라질의 교역량은 계속 늘어나 지난해 1504억 달러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브라질의 농산물과 광물을 구입하고 브라질의 대중 소비재 시장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했다.”

브라질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20세기 동안 제조업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킨 몇몇 경제 대국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브라질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수단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기는 중국이 세계 시장으로 막 재진입하던 때였다.

그 결과, 브라질은 탈(脫)제조업화해 식량·원자재 수출 의존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주되게 중국으로 수출하게 됐다.

그러나 중국이 브라질의 환심을 산 것은 이보다 좀 더 큰 추세的一部分. 바로 중국이 서구 자본주의 진영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결집시키려 하면서 그들에게 ‘디커플링’하라고, 즉 중국에서 시작되는 생산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왼쪽),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우호적 중국 방문으로 미국은 잇따라 체면을 구겼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중국이 서방 진영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은 제조업 생산자이자 원자재 소비자로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미국이 되돌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망에 대한 의존을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4월 4~8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도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마크롱은 유럽 차원의 일체감을 보이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을 대동했다. 이것은 심각한 역효과를 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마크롱을 대하면서는 그의 허영심을 기꺼이 추켜세워 줬지만, 폰테어라이엔에게는 쌀쌀맞게 대했다. 그녀는 평소 중국에 대해 훨씬 비판적이었다.

마크롱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만을 두고 중국과 벌이는 대결에 유럽이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열성 나토 지지자들의 맹비난을 샀다.

디커플링?

베이징을 방문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독일 녹색당 소속이자 호전적인 외무장관인 아날레나 베어보크였다. 베어보크의 즉석 연설을 두고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는 논평들이 많이 보도됐다. 독일군이 만성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좀 웃기는 메시지이다.

아무튼 베어보크의 노선은 유럽 지배계급들 사이에서 득세하는 입장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폰테어라이엔조차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

는다”고 말한다. 마크롱은 프랑스 재계 인사 수십 명을 데리고 중국에 갔다. 더구나 독일 자본주의에게는 대(對)중국 투자와 무역이 매우 중요해서 디커플링을 지지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금까지 디커플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 대기업이 투자 시설들을 중국에서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의 다른 제조업 경제로 옮기고는 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의 제조업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애플이 지난 20년 동안 거둔 놀라운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중국에 제조업 단지를 구축한 덕분이다. 그만한 제조 규모와 전문성을 포기하고 성공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유럽연합을 분열시키기는 쉽다. 조지 부시가 2003년 이라크 전쟁 문제로 그랬던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2008년 조지아 문제로, 2014년 우크라이나 문제로 그랬다.

그러나 중국이 서방 진영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은 단지 외교 수완이 좋거나 국가 간 경쟁 구도를 잘 파고들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의 그런 능력은 중국이 제조업 생산자이자 원자재 소비자로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파트너가 됐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이런 점을 미국이 되돌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번역 김종환

출처 Alex Callinicos, “China is creating splits in the Western bloc” (2023.4.18)

마르크스의 경제 위기론

강동훈

이 글은 4월 19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QR코드로 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위기는 흔히 금융 위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유럽의 크레디스위스 은행 부도로 금융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 붕괴를 낳았고, 이후 장기 불황으로 이어졌다. 당시는 지금과 비슷하게, 몇 년간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커지다가, 그 거품이 꺼지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과 경제 평론가들은 금융 자본과 투기꾼들의 투기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정부가 투기꾼들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게 문제라며 금융 규제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한다.

물론 금융 자본과 투기꾼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황당하리만큼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투기꾼들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제공받았는가?

이 질문에 주류 경제학은 “과잉 저축”이라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벤 버냉키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었고 1930년대 대불황에 관한 연구로 주류 경제학계에서 명성이 높은 유력 인사인데, 그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원인을 “글로벌 과잉 저축”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런 대답은 한참 부족하다. 도대체 과잉 저축은 왜 생겨났는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잉 저축은 실물 부문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쌓인 결과이다. 그래서 금융 위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물 부문의 수익성 악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생산 부문의 역학과 금융의 관계를 서로 연관시켜 파악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관점이다. 오늘은 경제 위기에 관한 마르크스의 설명을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유럽의 크레디스위스 은행 부도로 금융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노동가치론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는 단지 금융시장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본축적 과정 자체의 심각한 모순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은 이윤율 저하 경향이었다.

이윤율은 자본가들이 투자한 돈으로부터 이윤을 얼마나 얻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이윤율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 역학의 핵심이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투자한다.

어떤 자본가가 이윤을 얼마나 많이

얻는가는 그 자체로는 결정적이지 않다. 이윤율이 얼마나 높은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가령 1년에 1조 원의 이윤을 얻는 기업이 있다고 치자. 엄청난 돈이다. 그러나 100조 원을 투자해 1조 원의 이윤을 얻은 것이라면, 이윤율은 고작 1퍼센트 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 자본가들은 투자할 매력을 별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윤율이 높아야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 저하 경향을

이해하려면 마르크스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봐야 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마르크스는 노동가치론을 주장했다. 노동가치론은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다.(그림1)

자본가는 생산을 위해 기계와 원료를 구입하고 노동자를 고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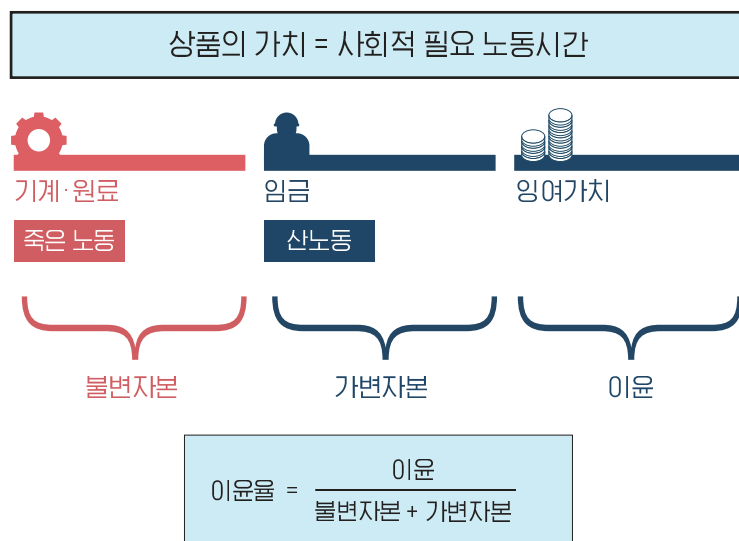
기계와 원료는 이미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이를 ‘죽은 노동’이라고 불렀다. 이 죽은 노동은 생산에 사용되면서 그 가치가 완제품으로 이전된다.

반면 노동자의 노동은 완성된 상품에 새로운 가치를 추가한다. 이렇게 추가된 가치 중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임금이다.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자본가가 가져간다. 마르크스는 이를 ‘잉여가치’라고 불렀다. 잉여가치가 자본가의 이윤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자본가의 투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계나 원료처럼 죽은 노동을 구입하는 투자는 그 가치가 완제품에 고스란히 이전돼, 회수된다. 마르크스는 이를 ‘불변자본’이라고 불렀다.

다른 한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지출된 투자는 다시 회수될 뿐 아니라, 추가로 잉여가치를 만들어 낸다. 이처럼 투자한 것보다 큰 가치로 변하기 때

그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



문에 마르크스는 이를 ‘가변자본’이라고 불렀다.

이윤을 저하 경향의 법칙

자본가들은 경쟁 때문에 축적을 해야만 한다. 그 때문에 자본가는 되도록 노동생산성을 올리려고 한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면 그만큼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 노동자 한 사람당 사용하는 불변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여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어 보자.

각 기업이 날마다 불변자본(기계, 원자재 등)으로 1만 원, 가변자본(임금)으로 1만 원을 투자하고, 1만 원의 잉여가치(이윤)를 얻고, 10개의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자.(그림2)

그러면 각 자본가가 하루에 생산한 반도체의 가치는 모두 3만 원이다. 하루에 반도체 10개를 생산하니까 반도체 1개의 가치는 3000원이다. 2만 원을 투자해 1만 원을 이윤으로 얻었으니, 이윤율은 50퍼센트다.

이때, 어떤 자본가가 신기술에 투자한다. 이 자본가는 여전히 임금으로 1만 원을 지불하고 잉여가치로 1만 원을 얻지만, 2만 원짜리 새 기계에 투자한다.(그림3)

이 기계는 생산성이 훨씬 좋아서 반도체를 하루에 100개 생산한다. 이 혁신 기술을 도입한 자본가가 하루에 생산한 반도체의 총가치는 이제 4만 원이 된다. 그 대신 반도체를 100개 생산했으니, 이 반도체 1개의 가치는 400원이다.

이 혁신 자본가는 경쟁에서 엄청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반도체를 (현재 시장가치인) 개당 3000원보다 훨씬 싸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당 450원에만 팔아도 업계 평균 이윤율을 얻을 수 있다.

판로를 늘리려고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반도체를 개당 1200원에 판매한다고 치자. 이렇게 싸게 팔아도 이 자본가는 개당 750원의 초과 이윤을 얻는다.

반면, 옛 기술을 사용하는 자본가들이 1200원에 판다면, 이윤은 고사하고 개당 800원씩 손해를 볼 것이다. 투자한 2만 원도 못 건지니 말이다.

사정이 이러니 결국 다른 자본가들도 기술 혁신에 나서고 곧 가격 인하 경쟁에 동참한다.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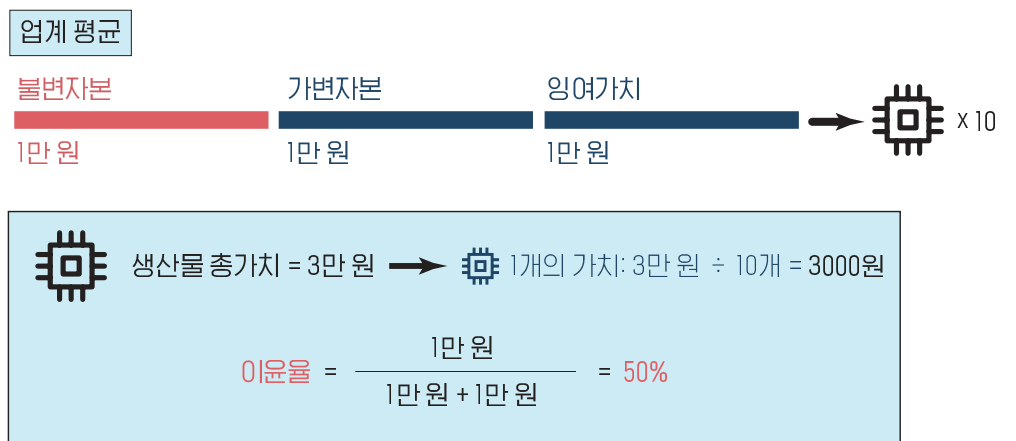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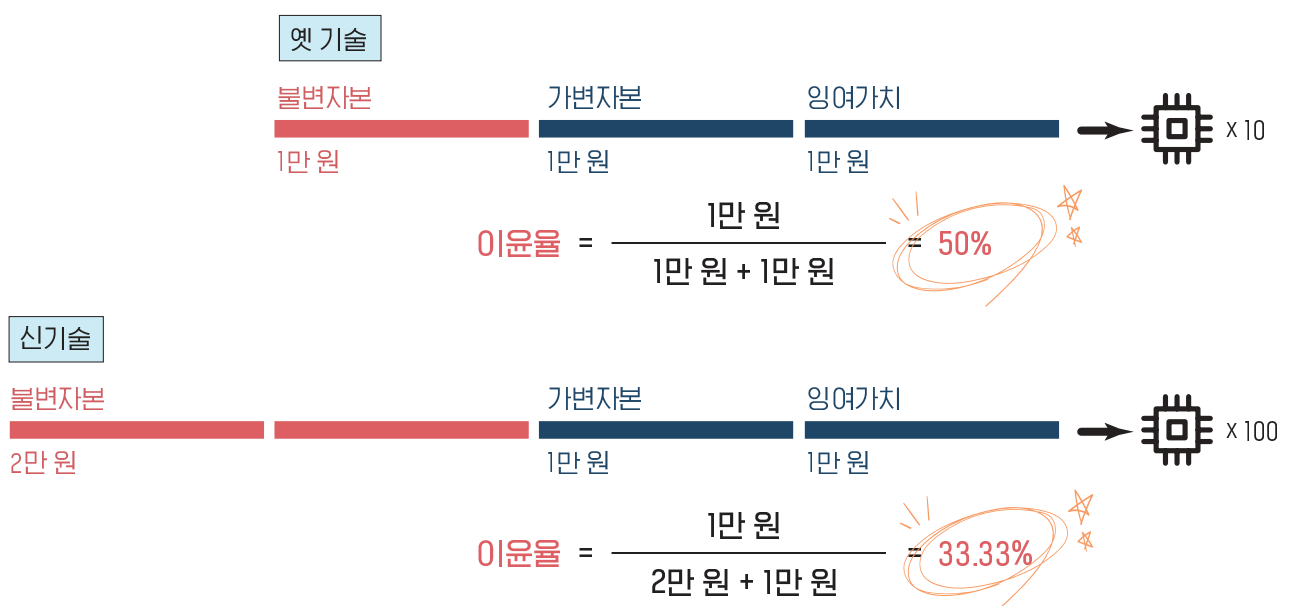


그림3 생산성 향상 경쟁



그림4 신기술이 보편화된 후 이윤율 저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기술이 보편화된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은 신기술로 생산할 때의 가치인 4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기술을 혁신하지 못한 자본가는 가격을 내릴 수 없어 망할 것이다.(그림4)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경쟁과 축적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윤율 수치를 살펴보면 매우 신기한 변화를 알 수 있다. 옛 기술을 사용했을 때는 2만 원을 투자해 1만 원의 이윤을 얻었으니, 이윤율이 50퍼센트였다. 그런데 신기술이 보편화됐을 때

자본가는 여전히 잉여가치로 1만 원을 얻지만, 3만 원을 투자했으니 이윤율은 33.33퍼센트로 떨어진다.

이처럼 축적 과정은 이윤율을 떨어뜨린다. 왜 그럴까? 자본가가 투자할 때 노동자 1인당 불변자본의 비중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가변자본 대비 불변자본 비중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불렀다.

자본가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기적 구성을 높이는 투자를 한다. 유기적 구성이 높아질수록 기계 사용이 늘어나

고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서 퇴출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잉여가치의 원천은 노동자의 노동(산 노동)이다. 자본가는 이윤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 자체를 몰아내는 셈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 모순이다.

근시안적인 자본가들

자본가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우선, 자본가들은 자기가 얻는 잉여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른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뿐 아니라 기계도 잉여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새 기계에 투자한 자본가는 초과 이윤을 얻으며 새 기계 덕분에라고 생각할 것이다. 새 기계를 가장 뒤늦게 도입한 자본가도 새 기계 덕분에 손해를 면하고 이윤을 얻게 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둘째, 신기술을 맨 처음 도입하는 자본가에게는 기술 혁신이 완전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 자본가는 상품 하나에 담긴 가치가 훨씬 적어졌는데도 한동안은 예전 가치보다 약간만 싸게 판매하면서 매우 높은 이윤율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자본가가 기술 혁신으로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게 되는 축적이 자아내는 효과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만 알 수 있다.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에 있는 모순이다. 각 자본가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새 기계를 도입해 단기적으로는 높은 이윤율을 구가한다. 하지만 다른 자본가들도 합리적으로 대응하면,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윤율 저하 경향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력 증대가 창출하는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더 좋은 기계를 이용해 더 적은 노동량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될수록 자본주의의 이윤율은 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생산성 향상이 점점 더 생산적 투자를 회피하는 이유가 된다.

이윤율 저하 경향은 자본주의가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음을 보여 준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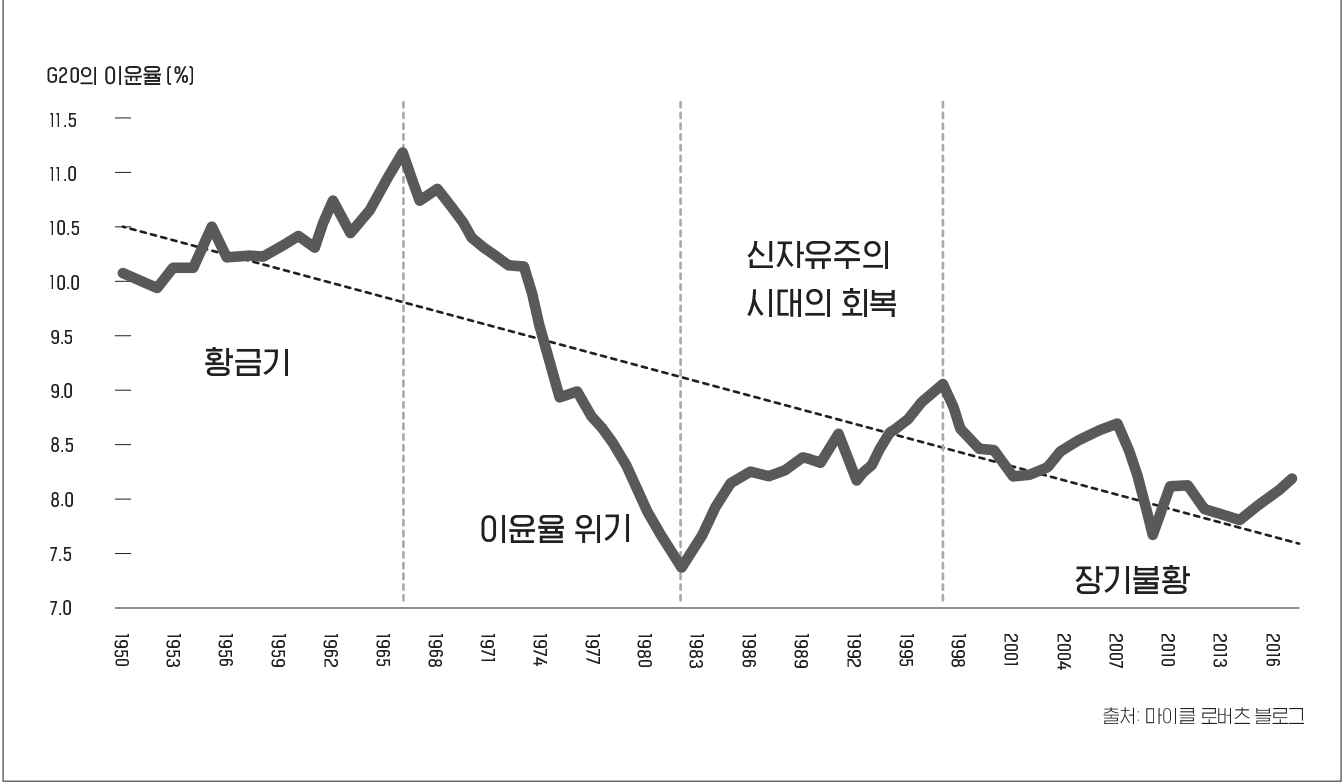
상쇄 요인

그런데 이윤율이 계속 저하하기만 한다면 자본주의는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이다. 분명히 다른 힘이 존재한다. 마르크스는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는 몇 가지 요인을 언급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

첫째,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자본가들이 더 많은 잉여가치를 얻는 것이다.

앞서 봤듯이, 자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여, 자기네 상품의 가치를 낮추는 경쟁을 벌인다. 이는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구입하는 상품들의 가치도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노동자 생계비 감소인데, 덕분에 더 적

그림5 실제로 이윤율은 떨어져 왔다



은 임금만 지급해도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자본가들은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노동강도를 강화하거나 임금을 줄이려고 한다. 실제로 1980~1990년대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에서 노동유연화, 노동시간 연장, 임금·복지 삭감 등으로 이윤율이 일부 회복했다. 그 결과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둘째,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불변자본의 가치도 떨어진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에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그만큼 빨리 오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불변자본의 가치가 대거 떨어지는 것은 바로 경제 불황 때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자본이 망해 사라지거나 다른 자본에 헐값에 인수되는 것이다. 이를 자본 파괴라고 한다. 자본 파괴는 실업을 동반하기 때문에 임금 삭감도 쉬워진다. 그래서 경제 불황이야말로 이윤율 회복의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상쇄 요인이 순조롭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육체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또, 자본가도 노동자들이 다음 날 건강한 상태로 출근해 일하기를 원한다.

둘째, 자본 파괴에도 한계가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이 커지면서 그 수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자본 단위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거기에 국가와 금융계가 긴밀히 맞물린다. 그래서 기업 하나의 파산이 연쇄 파산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결국 붕괴를 막고자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 개입은 모순된 효과를 낸다. 최악의 붕괴는 막을 수 있지만, 자본 파괴를 통해 이윤율이 충분히 회복되는 것도 막는 것이다.

이윤율 저하와 금융

이제 실물 부문의 이윤율 저하 경향과 금융 투기의 관계를 살펴보자.

금융은 생산 부문에 그저 기생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은 특정 자본가가 갖고 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투자를 당장 원하는 자본가에게 대출돼 자본으로 사용되도록 중개한다. 그 대가로 이자 수익을 얻는다. 자본주의 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도를 넘어서면 금융은 자본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특히, 이윤율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생산적 투자를 꺼리게 된다. 그러면 저축은 쌓이고, 생산된 제품은 다 팔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이를 두고 과잉생산이라고 한다.

이때,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은 그나마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옮겨 간다.

이 부문에 투자가 늘어나면 자산 가격이 더 올라 수익성이 다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금융 부문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소비를 늘려서 과잉생산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자산 투자가 점점 더 늘고 고수익을 노리는 위험천만한 투기도 늘어나게 된다. 그리 되면, 결국 거품이 터지면서 금융 위기가 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이윤율 저하 경향 때문에 벌어

지는 일이다. 금융 위기도 본질적으로 실물 부문의 이윤율 저하 때문이다.

이윤율 저하 경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그러나 많은 좌파들과 적잖은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경제 위기의 원인을 이윤율 저하 경향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 중 일부는 자본가들이 이윤율을 떨어뜨리는 기술 혁신을 추진할 리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개별 자본가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는 이윤율 저하 경향이 자본주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쇄 요인이 작용하므로 이윤율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상쇄 요인은 특정 조건에서 한시적으로만 작동한다.

이윤율 저하 경향을 부정하는 좌파의 상당수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조절하면 노동자의 처지도 개선하고 경제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윤율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

마르크스의 위기론인 이윤율 저하 경향은 사회 혁명의 필요성을 필연적으로 함축한다.

온라인 판에는 '데이비드 하비의 이윤율 저하론 비판을 반박한다'가 포함돼 있습니다

금태섭의 중도 신당과 정의당 내의 ‘세 번째 권력’ 경향 기존 여야 사이에서 제3지대 신기루 좇기

김문성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반면, 정의당의 존재감은 여전히 부진하다.

정의당은 최근 오락가락하는 인상도 줬다. 가령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며 참여한 여야 대치 전선에서 사실상 정부·여당과 공조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민주당과 개혁 입법 공조를 하면서 민주당의 내용 삭감 압력을 수용했다. 두 경우 모두에 정의당이 지나치게 온건하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 전망이 밝지 않자 구심력이 더 약화되는 듯하다. 당권자 수, 지역 활동가층과 조직이 약화됐다. 정의당의 일부 주요 인사들이 제3지대 중도 신당을 모색하는 것도 원심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성찰과 모색) 준비모임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가 4월 18일에 열렸다. 이 모임의 대표적 인사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제3지대 중도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다. 정치 양극화를 억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이 돕겠다며 거들었다.



금태섭 전 의원의 토론회에는 정의당 지도부들도 참석했다

금 전 의원은 검사 출신 중도 성향 정치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했다. 대선 때는 윤석열을 지지했으나 이내 결별했다.

이날 토론회에 정의당 인사들도 여럿 참가했다. 정종권 <레디앙> 편집인이 사회를 맡고,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장혜영 의원, 한석호 상생임금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토론회장에 모습을 비쳤다.

좌우를 넘어?

참가자들은 대부분 최근 양당의 (상대를 악마화하는) 진영정치에 실망한 제3지대(중원)에서 새 득표 기반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반국힘·반민주)

정의당은 지난해 대선·지방선거에서 연달아 부진한 성적을 거둔 뒤로 혁신 재창당을 하기로 했다. 이정미 집행부는 ‘자강’에 기초한 재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의당은 노동조합에서 민주당(이재명)에게 영향력을 빼앗기고 진보당에게 기반을 잠식당해 왔다.

게다가 민주노총 집행부의 “노동 중심 진보연합당” 제안이 정의당 재창당안과 부딪히면서 난관에 처했다. 페미니즘도 새로운 지지층 유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3지대나 중도 자유주의와의 연대론이 나온 것은 이런 정치적 좌절에 대한 대응의 일종인 듯하다.

그러나 윤석열의 위기로부터 정의당이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윤석열에 맞서 한결같이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민주당과의 차별화도 잘 안 되는 것이다.

영국의 좌파 저술가 타리크 알리는 이렇게 지적했다.

“제3의 길, ‘갈등 제로 정치’,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같은 도식의 주된 역할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어떤 참된 진보적 구상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변화 염원층이 있다. 문제는 이들의 의식과 활동성, 사기를 고무할 투쟁의 정치화·보편화가 없는 것이다.

류호정·장혜영·조성주 등의 ‘세 번째 권력’ 이미 실패한 ‘제3의 길’을 세대론으로 포장하기

4월 15일 출범한 ‘세 번째 권력’은 사실상 정의당 해체 후 신당 창당으로 우경적 정의당 재창당론이다.

이 그룹은 회원은 적지만, 현 정의당 지도부의 일원인 류호정·장혜영 의원, 이기중 현 부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소장과 류호정·장혜영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이 그룹은 정의당 재창당 방향이 노동 기반 강화로 향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 우파 정부 반대를 중심으로 세우는 노선에도 반대한다.

이런 온건 노선을 정당화하는 것이 ‘민주주의 세대’론이다. 독재 정권 등 타도할 대상이 사라진 시대에 자란 지금의 청년 세대는 다원주의 지향

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시대가 달라져 “변혁” 운운하던 시대는 끝났으니, 기성 정치 구조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노동중심성’은 노동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변혁론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군부독재를 대신해 등장한 재벌·자본가 독재를 타도하는 세계관을 가졌다는 점에서, 586의 ‘반독재 민주화 세계관’과 그 영혼이 다르지 않다.”(‘세 번째 권력’의 정책 리뷰 중)

그러나 “낡은 586 세계관” 운운은 체제 순응 노선을 세대 문제로 슬쩍 바꿔치는 용법이다.

그리고 이들은 “산업과 시장이라는 시야의 부재”가 기존 진보정치의

약점이라고 지적한다.

“진보정치는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선행할 뿐, 스웨덴 노총인 LO가 사실상 국가 운영에 참여하면서, 한계 산업의 정리와 산업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 연대임금제를 추진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다.]”

진보 정치가 정부·우파·기업·시장을 “거악”으로 규정하고 그에 반대하는 것을 정치의 임무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 되면 가령 윤석열 퇴진 운동에겐 까칠하지만 기성 체제에는 고분고분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시장 가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 그룹 인사들(장혜영·이현석 등)이 가스비 인상을 지지하고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고 때문이었던 듯하다.

결국 ‘세 번째 권력’의 노선은 신자유주의를 수용한(사회민주주의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서구 사민주의 정당들의 ‘제3의 길’ 노선의 재탕이다.

제3의 길을 표방한 서구 사민당 정부들(영국·프랑스·독일)은 신자유주의와 긴축 공격을 감행해 노동계급의 삶을 악화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 자유주의”로 불리며 2010년 중엽 이후로는 노동계급 대중의 버림을 받았다.

프랑스

저항으로 마크롱의 연금 공격을 되돌릴 수 있다

찰리 김버

지난주 파리·마르세유·니스·리옹·툴루즈·몽펠리에·상베리·낭트 등 프랑스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자발적 시위들이 분출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엘리트 정치인들과 국가 고위 인사들이 들어찬 기구)가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공격이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선포한 데에 사람들은 격분했다.

시위대는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악을 관철시킨 비민주적 방식에 분개했다.

의회 표결은 없었다. 대신 마크롱은 정부가 불신임 표결에서 패배하지 않으면 법 통과를 허용하는 헌법 조항을 이용했다.

파리 시위에 참가한 교사 소피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분노를 멈추지는 못합니다. 당국이 이 시위를 금지했지만, 너무 분노스러워 거리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헌법위원회는 새 연금법안의 여섯 개 조항을 삭제했는데, 대부분 법안 토론 기간에 의원들이 추가한 미미한 회유 조항들이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 수령 개시를 2년 늦추는 법안 내용을 문제가 없다고 통과시켰다.

또 헌법위원회는 일부 좌파가 현행 은퇴 연령을 유지하고자 대체 법안 국민투표를 요구한 것도 기각했다.

헌법위원회 판결 후에도 마크롱에게는 법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기까지



마크롱의 연금 공격을 인정한 헌법위원회 판결 이후 자발적으로 벌어진 시위

15일의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시행 연기를 애절한 노조 지도자들에게 망신을 주려고 마크롱은 [판결 바로 몇 시간 후인] 4월 15일 이른 새벽에 법이 공포되도록 만전을 기했다.

전략

이것이 투쟁 종료를 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조 지도자들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제 노조 지도자들 간 조정회의는 “모든 노동자, 청년, 연금 수령자들에게 5월 1일 연금 개정 반대와 사회 정의를 위한 특별 대중 동원의 날에 참가”할

것을 호소했다.

무척이나 낙장 대응이다. 그래서 네 개의 주요 철도 노조가 4월 20일을 “철도 노동자 분노의 날”로 선포했다. 이 노동조합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는 이 법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하고 밝혔다.

몇몇 노조 지도자들은 5월 1일이 마지막 항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미 프랑스민주노동자총연맹(CFDT) 사무총장 로랑 베르제는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은 정부와의 대화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 총파업을 건설하는 것에 기반을 둔 새 전략이라면 여전히 승

리할 수 있다.

2006년 2월 프랑스 정부는 최초고용법(CPE)으로 알려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정부는 청년들에게서 권리를 빼앗으면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원들이 이 법을 지지한 후에도 노동자와 청년들은 파업·시위를 지속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된 지 두 달 후인 4월에, 당시 총리 도미니크 드빌팽은 최초고용법을 적용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의회가 한 일을 거리와 작업장 투쟁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

나치와 대결하기

반(反)파시스트 활동가들이 항구 도시 르아브르에서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에 대대적으로 맞서자고 호소하고 있다.

르아브르는 1월 이래 노동자 저항의 중심지다. 그런데 나치 정당 국민연합이 5월 1일에 연회를 벌일 장소로 르아브르를 선택했다.

이는 도발이다. 노동자 운동과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이 대규모 시위로 이에 맞서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연합의 지지도가 올라갔는데, 이는 마크롱에 대한 혐오와 노조 지도자들의 전략 실패에서 득을 본 것이다.



하루가 아닌 장기 총파업이 필요하다

여러 단체들이 “르아브르에 파시스트는 안 돼, 르아브르는 파시스트를 위한 곳이 아니다”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를 호소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이 말한다: “우리를 막지 마라”

1월 이후 열두 번째 전국 행동의 날인 4월 13일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저항이 더 커질 잠재력을 보여 줬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파리에서 40만 명, 마르세유에서 13만 명, 툴루즈에서 7만 명, 보르도에서 4만 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마크롱의 야만적 공격을 수용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참고 넘어가기”를 거부한다.

파리 시위에서 공무원 노조의 한 지부는 마크롱과 자신의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록 밴드 쿼의 “지금 나를 막지 마(Don't stop me now)”를 스피커로 반복해서 틀었다.

뜻깊게도, 4월 13일 아침 수많은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파리와 몇몇 도시에서 맹렬한 “비공식” 시위를 벌였다.

파리 시위에 참가한 아브틸은 이렇게 말했다. “이 운동이 끝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노조들이 투쟁을 모두 관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 행동의 날은 파리의 폐기물

▶ 13면으로 이어짐

국민의힘은 전광훈을 떼어낼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국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극우 목사 전광훈 문제로 국힘의 내홍이 커지자, 국힘이 전광훈과 단절할 것인가가 주목받고 있다.

일부 당 중진들이 전광훈과 유착한 최고위원 김재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표 김기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광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한 대구시장 홍준표를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다. 이것이 윤석열의 뜻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런데 전광훈이 국힘에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고 국힘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자, 국힘 지도부는 전광훈과 거리 두기를 하며 당이 전광훈과 무관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다.

입당원서에 추천인으로 전광훈 목사를 기재한 당원 981명에게 이중당적 보유 금지에 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고 한다. 탈당은 권유해도 출당을 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국힘 지도부가 김재원에게는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재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재원이 설사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국힘이 극우 세력과 단절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힘은 늘 당 밖 극우 세력과 유착해 왔다.

현 대표 김기현을 포함해 국힘 정치인의 다수가 문재인 정부 때 우익 반정부 집회를 조직한 전광훈을 지원했었다.

여당이 된 지금은 총선에 불리할 것 같아 전광훈과 거리를 두려 한다.

전광훈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우파 집회를 수차례 조



국힘과 전광훈은 악어와 악어새 공생 관계일까?

직하면서 우파를 결속시키는 행동 대장으로 떠올랐다. 정권 교체 뒤에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반대하는 광화문 집회를 조직하고, 다른 곳에서 열리는 우익 집회에 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극우 중 전광훈처럼 동원력과 자금력이 큰 사람은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 8.15 광화문 집회 때 많은 대형교회의 극우 목사·장로들이 나서서 신도를 동원하며 전광훈을 지원했다. 극우 목사들과 정·재계의 우파들이 전광훈이 조직한 집회들에 자금을 지원했을 것이다.

전광훈은 미국 의원이 낸 '한반도 평화 법안'에 반대해 미국 의회에 로비 활

동을 해 왔다. 전광훈 목사 아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일보>는 올해 2월 미국 로비업체와 8억 원에 달하는 계약의 계약을 했다(<노컷뉴스> 2월 23일자). 이런 활동 자금의 원천은 숨겨져 있다.

전광훈은 개신교 극우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류 우파 정치인들과 연계를 키워 왔다.

윤석열은 대선에서 보수 복음주의 측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전광훈과 손을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고모인 목사 김혜섭(기하성여의도총회 로템교회)이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주간경향>

1509호).

윤석열이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을 초청하고 극우 인사들을 영입했다가 여러 차례 논란이 벌어졌다.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동성애·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사임한 김성희는 전광훈이 창간한 <자유일보>의 논설위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전광훈과 함께 활동했던 김문수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됐고, 최근 다시 전광훈을 옹호했다.

경제적·정치적·지정학적 위기가 깊어지고 있기에 주류 우파와 극우는 때로 긴장과 갈등을 빚어도 그들의 연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진희

▶ 12면에서 이어짐

수거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돌입해 이브리 쓰레기 소각장의 일부를 점거했다는 고무적인 소식으로 시작됐다.

철도·의료·교육 노동자들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파업 노동자들이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부지를 일시적으로 점거했다. LVMH 소유주 베르나르 아르노는 프랑스에서(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다.

“여기 돈이 있다.” 연대·단결·민주노조(SUD) 소속 철도노조 활동가들이 LVMH 본사 앞에서 연막탄을 터뜨리

고 깃발을 올리며 외친 말이다.

4월 12일, 노동총동맹(CGT) 산하 토탈 노조의 정규 노동자들은 3월 7일부터 이어져 온 무기한 파업을 끝내면서 씩씩해 하면서도 투지를 드러내는 어조로 파업 중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 운동이 난관에 부딪혀 있다면, 그것은 기층 노동자들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기층 노동자들은 몇 주나 파업을 이어 왔다.

“그 때문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적들의 야욕에 걸맞게 힘을 키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월 7일 이후 [하루 파

업·시위 행동의 날을 7번 개최하는 대신에, 이 파업 일정들을 하나로 이어서 경제를 완전히 멈춰야 했다. 그랬다면 운동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를 비롯한 사람들은 행동의 날을 띄엄띄엄 잡는 투쟁 방식이 결코 좋다고 여기지 않았다.”

정규 노동자들의 성명은 더 많은 저항을 호소하며 끝맺었다.

“마크롱 정권이 오직 경찰과 탄압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은 자신이 4년

이나 되는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없고 추진하려던 다른 개혁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을 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싸웠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모든 이들이 전장으로 돌아갈 때 적용할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하루에 그치지 않는 총파업이 전투적인 거리 시위와 함께했다라면 마크롱은 벌써 박살났을 것이다.

번역 김재현

출처 Charlie Kimber, “Resistance in France can undo president Macron's pensions assault”, (2023. 4. 18)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배달의민족’ 배달·사무직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속 1600여 명)이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사무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 요구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배달 수요가 대거 늘어났고, 이제 일상 생활에서 배달 앱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배달 앱 운영 기업들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음식 배달 시장을 70퍼센트 점유한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매출이 약 3조 원, 영업이익이 4200억 원에 이른다. 영업이익이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지난해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배달 서비스를 제공·관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급, 장시간 노동, 무한 경쟁에 신음하고 있다.

특히 기본배달료(서울 기준 3000원)가 9년간 동결돼 불만이 크다.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생계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본배달료 동결은 실질임금 감소다. 기만적이게도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를 인상한다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료를 인상했다.

배달의민족은 이처럼 기본료를 낮게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각종 프로모션(배달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나 기상이 안 좋을 때 배달료를 높게 책정함)을 시행하며 배달 인력을 유연하게 관리해 왔다.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배달료를 보충하고자 프로모션을 잡기 위해 속도 경쟁을 해야 했다. 이런 경쟁은 노동자들을 더 위험한 운전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들은 기본배달료를 인상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 가길 바란다.

여기에 최근에 ‘거리 두기’가 종료되면서 주문 수요가 줄어, 배달 노동자들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 주당 50~60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일상이고, 대부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다. 그리고 시간 당 배달 건수를 높이기 위해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노동강도도 높아진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러다가 누군



지난해 배달의민족은 4200억 원 흑자를 냈지만, 배달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상태다

가는 과로사로 쓰러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시간 노동과 속도 경쟁은 배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한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신청 수가 많은 기업 1위는 배달의민족이었다.

배달 노동자는 배달 플랫폼에 종속돼 통제 받으며 일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매월 자비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상당하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오토바이 구입비, 기름값, 보험료,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빼고 남은 월 순소득은 평균 285만 원 정도다.(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의 장시간 노동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가 아니다.

배달의민족이 1등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쥐어 짜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우아한형제들’ 의장 김봉진의 자산 1조 원 신화는 이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생계 유지와 안전을 위해 기본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라는 배달 노동자들의 요구는 완전 정당하다. 노동자들은 고객/음식업주가 내는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을 줄여 기본배달료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속도 경쟁

노동자들은 지방의 기본배달료가 3000원도 안 되는 차별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소비자로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같은 배달비를 받고 있으면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는 더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최근 배달의민족이 내놓은 ‘알뜰 배달’의 배달료도 기존과 동일한 기본배달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배달의민족은 이용자가 감소하자 고객·음식업주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는 ‘알뜰 배달’(동선이 비슷한 집들을 묶어서 배달)을 내놓았다. 그런데 노조에 따르면 ‘알뜰 배달’을 하는 노동자의 기본배달료는 2200원으로 800원이 삭감된다. 배달료 인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한편, 배달의민족 자체 배송 관리 업무와 B마트(지점)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사무직 노동자들은 본사 직원들 처럼 주 4.5일 35시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본사 근무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주 5일 40시간 일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들에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배달·사무직 공동 파업을 준비 중이다.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배달의민족 본사 근처에서 오토바이 400대가 참가하는 집회를 하고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장소까지 행진을 한다.

그리고 배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하루 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비조합원들의 동참도 호소하고 있다. 기본배달료 인상 요구에 비조합원들의 지지도 높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파업 지지와 연대의 의미로 이날 배달의민족 불매 운동을 요청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노동자들이 파업과 투쟁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어 내기를 응원한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윤석열은 경찰력 정당화 위해 ‘마약과의 전쟁’ 벌인다

윤석열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 하고 밝혔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합동으로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언론의 관심을 끌려고 유명 연예인 유아인 씨를 표적으로 삼은 수사도 몇 달째 이어 가고 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사건은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마약’ 사건이라기보다는 ‘피싱’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속여서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마약 복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돈을 요구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열을 올릴수록 오히려 이런 범죄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마약과의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자본주의 체제가 낳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소외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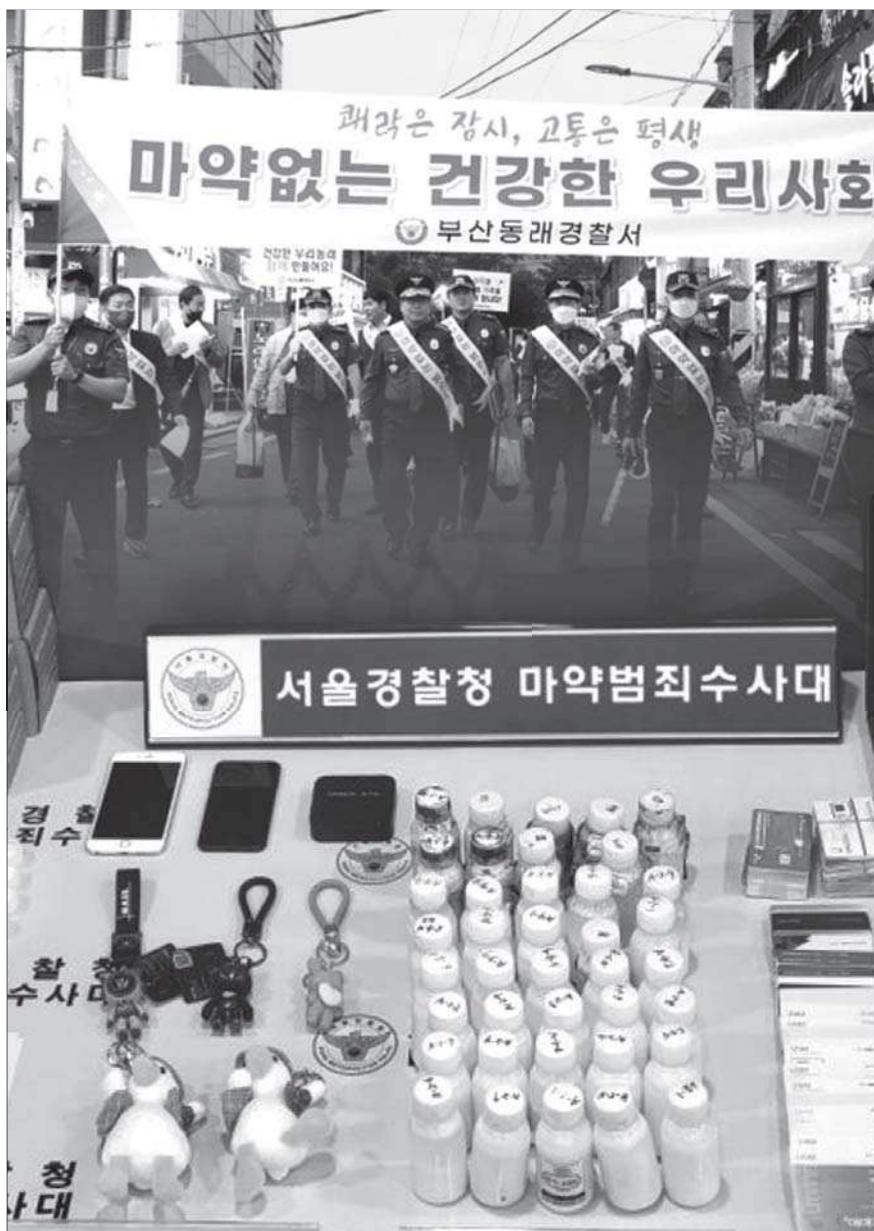
물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모두 약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통이 커지는 만큼 약에 의존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특히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정부가 이들의 약물 사용을 처벌하는 것은 가혹할 뿐 아니라 파렴치한 것이다. 정부 자신이 그런 고통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치동 사건은 청소년들이 경쟁 교육 속에서 겪는 고통을 보여 준 사건이기도 했다. 잠을 줄이려고 카페인과 온갖 에너지 음료들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 주는’ 음료는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 음료 기업들이 마약과 근본에서 차이가 없는 합법 음료 판매에 영향을 줄까 봐 마약 합법화에 반대해 온 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세방 한 칸 마련하려고 수십 년을 뺏 빠지게 일하고도(지난해 임금근로자 100명 중 9명은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됐다)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때 순간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몬다.

마약 사용자가 급증했다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극히 적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2021년 마약 사용자가 50만~10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돌봄 받아야 할 이들을 처벌해 서민층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 시도하기

그러나 합법적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분류된다) 사용자인 우울증·불안장애 환자만 해도 2021년에 각각 93만 명, 87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각각 35.1퍼센트, 32.3퍼센트나 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십 년째 OECD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인내심이 놀랄 정도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최근 정부가 대마 등 일부 마약을 비범죄화한 것은 이런 사회에서 마약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사람들의 건강이 아니라 경찰과 감옥에 쓰이는 재정 지출 절감이 더 주된 동기였겠지만,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

돈 없고 ‘뺨’ 없는 마약 사용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실업, 밑바닥 삶과 감옥에 오가도록 내몰린다. 정부는 본보기 삼아 일부 부유층 자제들을 처벌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다른 취약계층과 같은 처지로 내몰리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상황을 모두 안다.

비범죄화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얻고자 하는 진정한 효과는 사람들을 막연한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이다. 경찰청장 윤희근은 “테러와도 같은 마약 범죄”라고 과장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면 첫째, 검찰·경찰 등 억압적 국가기구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권력자들에게는 거의 수학 공식처럼 잘 알려진 수법이다. 막연한 위협에 대처하려면 도·감청, 인터넷 감시와 폐쇄에 관한 광범한 권한 부여, 불시 검문이나 합정 수사 등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처나 가혹한 처벌도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법원도 이런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국가 권력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속죄양 삼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특별수사본부에 인력 840명을 투입하겠다고면서 마약 중독 치료에는 쥐꼬리만 한 예산 지원과 재활 전문인력 190명 양성 계

획만 내놨다. 2022년 마약 중독 치료자는 고작 721명이었다.

둘째, 마약 사용을 범죄화함으로써 정부는 평범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권위를 획득하고 통제력을 행사하려 한다. 이런 권위와 통제력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예컨대 한미일 지배자들 사이의 경제적·지정학적 협력(윤석열이 ‘국익’이라고 말하는)을 추진하는 데에 방해되는 ‘문제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쉬워진다. 동맹국인 미국의 도청 문건을 문제 삼거나,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던 무기 공급 계획을 폭로하는 일, 식민지 시절 일제의 위안부·강제동원 문제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거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일 등 말이다.

더 나아가 기업 이윤에 타격이 될 노동자들의 파업,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 등도 억누르기 쉬워진다.

셋째, 사회 문제들 중에서 특히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익적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해 분리하고 원자화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관점에서 범죄를 보게 하면 범죄를 맥락에서 분리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데에 이용하기도 유리해진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생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부유층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범죄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재활을 돕지도 못한다.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진정한 위협은 마약이 아니라 장기화되는 불황, 기후 위기, 전염병과 전쟁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체제다. 가난하고 소외된 청년들이 아니라 검찰·경찰을 비롯한 억압기구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협한다.

윤석열은 바로 이 자본주의 체제와 그 수혜자들, 권력자들을 지키려고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웠다.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을 줄이는 데는 필패할 것이다. 그러나 선정적 언론들의 도움으로 정부가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정부는 자신들이 의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마약과의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장호중



전세 사기 피해자 잇따른 자살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상하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모두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 7000만~9000만 원 대부분을 날릴 상황에 처하고, 심각한 생활고를 겪어 왔다. 엄마에게 2만 원만 빌려 달라는 말을 남긴 20대 청년, 수도 요금을 못 내 단수 예고장이 붙은 30대 청년의 처지는 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케 한다.

이들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조만간 무일푼으로 쫓겨나거나 전세금 대부분을 잃을 상황이었다.

올해 2월 28일에 목숨을 끊은 30대 피해자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이미 남긴 바 있다.

전세보증금 문제가 터져 나온 지 한참이 지났지만,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정부 대책은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사람더러 다시 수천만 원의 빚을 내라는 게 대책이 되겠는가. 임대주택도 현 거주지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피해자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자 정부는 부랴부랴 경매를 중단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경매 일정을 일시적으로 연기한 미봉책일 뿐이다. 게다가 정부가 금융업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 아직도 수백 채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것인데,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전혀 없다.

사회적 재난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개인 문제에 대해 세금을 투입해서 전액을 보상해 주기에는 법 제정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니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는 단지 개인 간의 사기 문제가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거품이 커지면서 전셋값도 따라 올라 수많은 세입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대출을 늘려 주기만 할 뿐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갭투자’의 위험성과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왔지만, 정부는 세입자 대책 마련을 등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의 허점 등을 활용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판을 친 것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말처럼 이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다.

반면, 정부는 올해 건설 원가보다 2억 원이나 비싼 가격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건설사 구제에 나선 바 있다. 건설사 부실이 커지자 올해 1월에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혜택을 주기도 했다. 전세 사기와 같은 서민층의 재산 손실 문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말이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문제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3000세대 5000여 명이 겪고 있는 전세 사기에 이어, 최근에는 동탄시에서 오피스텔 250채를 소유한 부부가 파산해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공동 주택 중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깡통 주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38퍼센트에 달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2020년 80퍼센트 전후에서, 2021년 92.9퍼센트로, 지난 상반기부터는

110.5퍼센트까지 치솟았다. (한국도시연구소, ‘2022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과제’)

민주당, 정의당 등은 정부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전세금을 보상해 주고, 이후에 주택 경매나 임대주택 전환 등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물론 이는 정부 대책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보증금을 전액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은 선순위 대출이 있는 등(적지 않은 경우 그렇다)의 상황에서는 이를 감안해 전세 보증금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선순위 대출이 많으면 세입자는 여전히 큰 손해를 본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 보상액이 전세보증금의 50퍼센트 이상은 돼야 한다는 내용을 발의 법안에 담았다. 그럼에도 전세보증금을 최대 50퍼센트까지 잃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노동자 등 서민층이다.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자가 대폭 늘어났다.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야 마땅하다.

정선영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무기

②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

4월 26일(수) 오후 8시

발제 이원웅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공저자

유튜브 실시간 방송

노동자연대TV 검색

